

부산 복구 조례 정비 및 우수조례 연구를 통한 조례 제·개정 연구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정비 및 우수조례
연구를 통한 조례 제·개정
연구용역

2023. 9.

나라살림연구소

제 출 문

부산 북구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 북구 조례정비 및 우수 조례 연구를 통한
조례 제·개정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9.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용역발주처

부산북구의회

목 차

I.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1
2. 연구의 목표	3
3. 연구범위	3
4. 연구 내용	3
5. 연구방법	4

II. 자치법규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자치법규의 개념	5
1)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관련 규정	5
2) 조례와 규칙	7
2. 자치법규 운영 현황	8
1) 전국 조례 운영 현황	8
2) 지역별 조례 제·개정 현황	8

III. 부산북구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부산북구 자치법규 현황	10
1) 부산북구 자치법규 수	10
2) 부산북구 자치법규 편장 구성	12
3) 제·개정시기별 조례 현황	16
2. 부산북구 필수조례 정비현황	17
1) 필수조례의 개념과 정비 필요성	17
2) 부산북구 필수조례 정비현황 검토	17

IV. 부산북구 자치법규 정비 과제

1.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정비방향 점검	22
1)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중 우선정비 대상 검토	22
2) 정비 필요 미정비 필수조례 정비방향 점검	23

3) 정비 상황 집계 착오 시정 필요 필수조례	34
3. 위원회별, 편장별 조례 정비 필요성 검토	44
1) 행정복지위원회	45
2) 주민도시위원회	58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한	65
일괄정비검토	65

V. 부산북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

1. 부산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75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9
3. 부산 북구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82
4.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84
5. 부산광역시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89
6.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92
7.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5
8.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99
9.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101
10.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104
11.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109

I .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향

□ 자치법규 및 조례의 양적 성장

- 지방분권 2.0으로 분권화의 흐름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효용성이 제고되면서 조례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조례는 민주적 선출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헌법 제117조를 통해 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통해 구체화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당대를 살아가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실질적 입법적 수단임.
- 조례는 지자체의 정책환경과 시의성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법령체계 내 일 부로써 체계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자치권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임.

□ 조례 정비의 필요성 제고

- 2023년 7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운영 중인 조례는 1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제고도 이루어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정책을 제안하면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상위법령으로 제정된 우수조례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조례정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실무 관련 사항을 개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으면서 규제개혁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민들에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 등 적법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는 조례가 확인되기도 하며,

- 상위법령의 용어변경 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조례, 일본식 한자어나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임.

- 이하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부산북구)의 조례의 적법성과 체계정합성 및 주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안함.

□ 부산북구 조례 제·개정 현황 확인 및 정비 필요성 점검

- 부산북구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음. 부산북구 조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 대상 조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시점임.
- 이를 위해 현행 339건의 부산 북구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조례의 편장 구성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유사규모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부산 북구 조례의 특성을 확인하고
-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반영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필수정비조례의 정비현황을 확인하고, 미정비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개별 미정비필수조례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함.
- 의회 위원회 및 부산 북구 사업부서를 기준으로 소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적법성 및 입법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제시함.
- 부산북구 지역의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부산 북구의회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있는 구현을 통해 선진적 지방의정의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2. 연구의 목표

- 부산북구 조례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필수조례 정비상황 점검 및 미정비 조례에 대한 정비방향 점검
- 위원회별 개정조례 점검 및 개정의 쟁점 분석
- 신규조례 제정 제안

3. 연구범위

- 과업명 : 부산북구 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 과업기간 : 2023년 6월 ~ 9월(3개월)
- 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 내용적 범위 : 부산북구 조례의 현황 분석 및 제개정 필요성 점검

4. 연구 내용

☐ 부산북구 조례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부산북구 조례 편장별 조례 구성 분석
- 부산북구 위원회별 조례 현황 파악

☐ 필수정비대상 조례 점검

- 필수정비조례 정비현황 검토
- 미정비조례 분석 및 정비방향 제안

☐ 위원회별 조례 제·개정 필요성 분석

- 조례 정비 기준 제안
- 정비기준별 정비대상 조례 점검 및 정비방안 제안

☐ 부산북구 신규 자치법규 입법 가능성 검토

○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자치법규 제·개정 방안 제안

○ 부산북구 맞춤형 신규 자치법규 제안

5. 연구방법

☐ 법령사이트 활용 조례 정비현황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

○ 현행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필수조례 정비사항 등을 확인

○ 전국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분석을 통해 우선정비 조례 개선방안 연구

☐ 조례 입안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을 검토해 조례 입안 경향 분석

○ 타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사를 통해 부산북구 조례 적용 검토

II. 자치법규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자치법규의 개념

1)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관련 규정

□ 자치법규 제정의 헌법적 정당성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17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는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가지 권한을 확인하는 수권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통해 자치법규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해당 규정 및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근거로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권한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며, 법률로부터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응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로부터 조례로의 위임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지방자치법에 따른 근거와 기준

- 지방자치제의 입법체계인 자치법규의 실질적 구속력과 입법한계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는 해당 제도의 기본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여됨.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자치법규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의 조례 위임사항이 해당 법령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되거나 대신 규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9조는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0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소관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기초와 광역 조례간의 상호 충돌시 광역정부의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 지방자치법 제34조는 조례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2) 조례와 규칙

- 자치법규는 자치법규 정립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됨. 1)
- 넓은 의미의 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며, 규칙은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단체장의 권한으로 제정됨.

[표 1] 조례와 규칙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조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제정함	지방자치법 제28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함	지방자치법 제2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제1항

자료: 법제처(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 조례’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 조례’로, 조례 제정의 재량 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 조례’로 구분됨.

[표 2] 조례의 분류

구분	관련 규정
법령 위임	
위임조례	개별 법령의 위임에 의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및 벌칙을 정하는 조례
자치조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조례 제정 재량	
필수 조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조례
임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해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자료: 법제처(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1) 법제처(2022),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2. 자치법규 운영 현황

1) 전국 조례 운영 현황

○ 2023년 8월 3일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0만 9천여건에 육박하고 있음.

－ 이 가운데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12,809건이며, 226개 기초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96,078건임.

[표 3] 전국 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2023년 8월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12,809	96,078	108,887
규칙	2,528	24,943	27,471
훈령	1,660	13,621	15,281
예규	490	3,382	3,872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_자치법규현황 (<https://www.elis.go.kr/sysinfo/alrStatList> / 검색기준일: 2023.8.3.)

2) 지역별 조례 제·개정 현황

○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31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로 총 16,504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두 번째인 전라남도의 11,025개와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냄.

－ 전라남도에 이어 운영 조례수가 많았던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0,095개였으며, 다음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순이었음.

[표 4] 전국 17개 광역별 자치법규 운영현황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서울특별시	10,095	2,954	953	298
부산광역시	6,093	1,435	1,028	414
대구광역시	3,684	956	604	326
인천광역시	4,288	1,153	543	218
광주광역시	3,073	683	516	235
대전광역시	2,625	574	444	60
울산광역시	2,402	582	368	69
세종특별자치시	669	117	79	17
경기도	16,504	4,195	1,864	568
강원특별자치도	8,197	2,213	1,294	246
충청북도	5,538	1,296	757	157
충청남도	8,173	1,886	1,112	272
전라북도	7,211	1,726	1,132	207
전라남도	11,025	2,546	1,460	261
경상북도	9,058	2,534	1,624	241
경상남도	8,569	2,126	1,111	206
제주도	564	356	163	10
제주특별자치도	980	190	85	42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_자치법규현황 (<https://www.elis.go.kr/sysinfo/alrStatList> / 검색기준일: 2023.8.3.)

Ⅲ. 부산북구 자치법규 현황 분석

1. 부산북구 자치법규 현황

1) 부산북구 자치법규 수

□ 부산북구 현행 및 폐지 자치법규 수

- 부산북구 현행 자치법규는 2023년 8월 현재 조례 339개, 규칙 83개, 훈령 57개, 예규 23개 등 모두 502개임.
- 폐지된 부산북구 자치법규는 조례 65개, 규칙 33개, 훈령 32개, 예규 13개 등 143개임.

[표 5] 부산북구 자치법규 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총합
현행법규	339	83	57	23	0
폐지된법규	65	33	32	13	0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_자치단체별 자치법규 (<https://www.elis.go.kr/locgovalr/locgovCIAIrList> / 검색 기준일: 2023.8.3.)

□ 부산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수와의 비교

- 부산북구 자치법규 수를 부산광역시 내 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 내에서 자치법규의 총 개수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남구로 모두 559개의 자치법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다음은 해운대구로 546개였고, 이어서 기장군(523개)과 사하구(517개) 순이었음.
- 부산광역시 내에서 자치법규의 총 개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체는 금정구

로 427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음.

- 부산북구의 자치법규 수는 부산광역시내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많았으며, 광역 내 기초지자체 중에서 자치법규 총 수에서 부산북구와 가장 유사한 지자체는 연제구(505개)와 동구(495개)등이었음.

□ 부산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수와의 비교

- 부산광역시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조례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남구로 362개였으며, 다음은 해운대구로 361개였음.
- 부산북구의 조례 개수는 광역내에서 7번째로 많았으며,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67.53%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았음.

[표 6]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수 및 조례의 비중

자치단체		자치법규 총수	조례	자치법규 중 조례 비중	규칙	훈령	예규
총계		8970	6093	67.93%	1435	1028	414
부산광역시		1117	881	78.87%	115	91	30
1	부산광역시 남구	559	362	64.76%	92	81	24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46	361	66.12%	87	71	27
3	부산광역시 기장군	523	360	68.83%	84	60	19
4	부산광역시 사하구	517	349	67.50%	88	61	19
5	부산광역시 연제구	505	333	65.94%	82	61	29
6	부산광역시 북구	502	339	67.53%	83	57	23
7	부산광역시 동구	495	315	63.64%	85	58	37
8	부산광역시 영도구	493	340	68.97%	82	47	24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91	322	65.58%	87	61	21
10	부산광역시 중구	489	341	69.73%	74	54	20
11	부산광역시 동래구	483	323	66.87%	83	55	22
12	부산광역시 서구	480	333	69.38%	74	49	24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469	298	63.54%	82	65	24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438	281	64.16%	80	50	27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436	283	64.91%	78	52	23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427	272	63.70%	79	55	21

2) 부산북구 자치법규 편장 구성

□ 부산북구 자치법규 편장 구성 및 법규 수

- 부산북구 자치법규의 편장 구성 및 편장별 자치법규의 수는 다음과 같음.
- 편명이 폐지법규로 되어 있는 제29편(내용 없음)을 포함해 총 29편 10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108개 장 가운데 가장 많은 자치법규로 구성된 장은 제1편 의회의 의정 장으로 35개의 자치법규로 구성됨.
- 29개 편 가운데에는 제2편 기획감사편의 자치법규 수가 75개로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조직법무 장의 자치법규가 33개였음.
- 이어 제4편 행정자치편의 자치법규가 60개로, 이 가운데 자치행정장의 자치법규가 28개로 장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자치법규로 구성됨.

[표 기 부산북구 자치법규 편장 구성별 법규 수

편	장	법 규 수	편	장	법 규 수	편	장	법 규 수
1	의회	1 의정	10	복지정책	1 복지정책	20	안전총괄	1 안전총괄
		2 의사			2 희망지원			2 민방위
		소계			3 장애인복지			3 안전예방
2	기획감사	1 기획	11	아동청소년	1 아동복지			4 기전관리
		2 예산			2 아동보호			5 통합관제
		3 조직법무			3 청소년드림스타드	21	도시창조	1 도시공간기획
		4 청렴감사			4 보육			2 도시공간사업
		소계			소계			3 공동주택관리
3	미래전략	1 신청사건립	12	교육지원	1 교육기획	22	교통행정	1 교통기획
		2 전략사업			2 교육지원			2 교통사업
		3 복합사업			3 도서관			3 자동차관리
		4 소통미디어			소계			4 주차지도
		소계			소계			5 교통과징
4	행정지	1 총무	13	주민복	1 노인정책			
		2 자치행정			2 노인시설			

원	3	단체복지	11	지	3	가족친화	10	도시관리	소계		14					
	4	중대재해예방	1		4	자활지원	1		1	도시관리	1					
	소계		60		소계		20		2	광고물관리	2					
5	문화체육	1	문화예술	12	14	생활보장	1	생활보장	5	23	도시관리	3	도로정비	0		
		2	관광기획	2			2	통합조사관리	0			소계		3		
		3	체육지원	7			소계		5							
		4	문화예술회관 운영	2	15	일자리경제	1	일자리창출	5	24	건설	1	건설행정	0		
		소계		23			2	청년희망	2			2	도시계획	3		
6	재무	1	회계	7	16	자원순환	3	경제진흥	8			25	건축	3	토목	3
		2	공공재산관리	4			4	산업관리	11					4	생태하천	3
		3	정보통신	1			5	동물친화	5					5	하수관리	0
		4	전산정보	3			소계		31					소계		9
		소계		15												
7	세무1	1	세무관리	12	17	환경위생	1	청소행정	4	26	보건행정	1	건축행정	1		
		2	취득세	0			2	재활용	5			2	건축허가	1		
		3	재산세	0			3	폐기물관리	5			3	주택허가	2		
		4	과표평가	0	소계		14	4	재개발			1				
		5	채납정리	0	18	공원녹지	1	환경관리	7			27	건강증진	5	공공건축	0
소계		12	2	환경지도			3	소계		5						
8	세무2	1	세입관리	0	18	공원녹지	3	위생관리	4	28	건강증진			1	보건행정	3
		2	지방소득세	0			소계		14					2	감염병관리	3
		3	자동차세	0			1	공원	0					3	감염병대응	0
		4	주민세	0	2	산림행정	3	4	의약			4				
		5	세외수입	3	소계		4	소계				10				
9	민원봉사	1	고객만족	8	19	토지정보	1	토지관리	3	28	덕천지소	1	건강증진	5		
		2	여권기록물	5			2	지적관리	1			2	가족보건	1		
		3	가족관계등록	0			3	주소정보	2			3	정신건강	3		
		소계		13			4	지적재조사	1			소계		9		
							소계		7			소계		1		

□ 편장별 조례 구성

○ 편장별 조례의 수는 다음과 같음.

○ 자치법규의 수가 35개였던 제1편 제1장 의정의 조례 수는 14개로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해 전체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 67.5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음.

○ 자치법규의 수가 75개였던 제2편 기획감사의 조례 수는 35개로 편 가운데 조례 수는 가장 많았으나 자치법규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46.67%였음.

○ 장 가운데 조례 수가 가장 많은 장은 제4편 제2장 자치행정으로 20개였으며, 다음은 제20편 안전총괄 제1장 안전총괄로 17개 순이었음.

[표 8] 부산북구 자치법규 편장 구성별 조례 수

편	장	조례 수	편	장	조례 수	편	장	조례 수
1	의회	1 의정	10	복지정책	1 복지정책	20	안전총괄	1 안전총괄
		2 의사			2 희망지원			2 민방위
		소계			3 장애인복지			3 안전예방
2	기획감사	1 기획	11	아동청소년	소계			4 기전관리
		2 예산			1 아동복지			5 통합관제
		3 조직법무			2 아동보호			소계
		4 청렴감사			3 청소년드림스타드	21	도시창조	1 도시공간기획
		소계			4 보육			2 도시공간사업
3	미래전략	1 신청사건립	12	교육지원	소계			3 공동주택관리
		2 전략사업			1 교육기획	22	교통행정	소계
		3 복합사업			2 교육지원			1 교통기획
		4 소통미디어			3 도서관			2 교통사업
		소계			소계			3 자동차관리
4	행정지원	1 총무	13	주민복지	1 노인정책	23	도시관리	4 주차지도
		2 자치행정			2 노인시설			5 교통과징
		3 단체복지			3 가족친화			소계
		4 중대재해예방			4 자활지원			1 도시관리
		소계			소계			2 광고물관리
5	문화체육	1 문화예술	14	생활보장	1 생활보장	24	건설	3 도로정비
		2 관광기획			2 통합조사관리			소계
		3 체육지원			소계			1 건설행정
		4 문화예술회관 운영	15	일자리경제	1 일자리창출			2 도시계획
		소계			2 청년희망			3 토목
6	재무	1 회계			3 경제진흥			4 생태하천

		2	공공재산관리	1		4	산업관리	8			5	하수관리	0		
		3	정보통신	0		5	동물친화	3			소계		5		
		4	전산정보	3		소계		26			1	건축행정	0		
		소계		7		자 원 순 환	1	청소행정				2	2	건축허가	1
7	세무 1	1	세부관리	6	16		2	재활용	3	25	건축	3	주택허가	2	
		2	취득세	0		3		폐기물관리	4			4	재개발	1	
		3	재산세	0		소계		9	5			공공건축	0		
		4	과표평가	0	17	환 경 위 생	소계		4			소계		4	
		5	채납정리	0			1	환경관리	6			26	보건 행 정	1	보건행정
		소계		6			2	환경지도	3	2	감염병관리			3	
8	세무 2	1	세입관리	0	3	위생관리	3	3	감염병대응	0					
			소계				12	4	의약	3					
			소계				8								
		2	2	지방소득세	0	18	공 원 녹 지	1	공원	0	27	건강 증 진	1	건강증진	5
			3	자동차세	0			2	산림행정	3			2	가족보건	1
			4	주민세	0			3	녹지	1			3	정신건강	3
5	5	세외수입	2	소계		4	소계		9						
	소계		2	19	토 지 정 보	1	토지관리	1	28	덕 천 지 소			1	보건관리	0
	9	민원 봉 사	1			고객만족	3	2			지적관리	0	2	1	건강관리
2			여권기록물			1	3	주소정보			2	2	소계		1
3			가족관계등록			0	4	지적재조사			1	소계		1	
소계			4	소계		4	소계		1						

3) 제·개정시기별 조례 현황

□ 시기 구분 기준과 현황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 3월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같은해 6월에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져 1991년 7월 4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후 4년 주기로 선거가 이루어져 7월에 의회의 임기가 갱신되었음.
- 현행 부산북구 조례를 제개정시기가 속한 의회 임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9]와 같음. 해당 제개정시기는 최종 제개정시점으로 당해 회기에 제 개정된 조례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회기에 제개정된 이후 다시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의 수를 의미함.
- 부산북구 조례 가운데 제 개정시점이 가장 오래된 조례는 제4대 의회 임기 중인 2005년 8월 1일 제·개정된 ‘부산북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등 5개의 조례이며, 제 5대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부산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년 2월 28일)’등 3건임.
- 2023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이번 회기인 제9회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98건이었으며, 이전 제 8대 의회의 임기인 2018년 7월1일에서 2022년 6월30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가 193개로 가장 많았음.

[표 9] 제·개정시기별 부산북구 조례 현황

제개정시점	조례수	조례수
4대	2002.7~2006.6	5
5대	2006.7~2010.6	3
6대	2010.7~2014.6	7
7대	2014.7~2018.6	33
8대	2018.7~2022.6	193
9대	2022.6.~	98

2. 부산북구 필수조례 정비현황

1) 필수조례의 개념과 정비 필요성

-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일정한 항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즉 상위법령에 의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함.
- 국가법령체계 소관부처인 법제처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시스템²⁾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들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동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필수조례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규제개혁 등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주민의 권익침해소지를 방지하고,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개선 효과를 지자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부산북구 필수조례 정비현황 검토

- 2023년 8월 기준 부산북구 필수조례 정비율 76.1%, 도내 첫번째
- 2023년 8월 현재 부산북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6.1%로 정비대상 184건 가운데 140건의 정비가 완료되고, 44건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부산북구의 필수조례 정비율 76.1%는 부산광역시 본청의 정비율 79.3%

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필수조례정비현황

<https://www.law.go.kr/ordinDelegationSc.do?menuId=3&subMenuId=29&tabMenuId=149>

보다는 낮지만 부산광역시내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부산지역 전체의 정비대상 필수조례 건수는 3,391건이며 정비완료 건수는 2,494건으로 정비율은 73.5% 수준임.

[표 10] 부산광역시내 기초지자체 필수조례 정비율

지자체명	정비완료건수	정비대상건수	정비율
부산지역 합	2,494	3,391	73.5%
부산광역시 본청	340	429	79.3%
부산광역시 북구	140	184	76.1%
부산광역시 연제구	137	182	7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36	181	75.1%
부산광역시 수영구	137	184	74.5%
부산광역시 동래구	135	182	74.2%
부산광역시 남구	141	192	73.4%
부산광역시 기장군	139	190	73.2%
부산광역시 사상구	134	183	73.2%
부산광역시 금정구	132	183	72.1%
부산광역시 강서구	134	186	72.0%
부산광역시 사하구	133	185	7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32	185	71.4%
부산광역시 서구	131	184	71.2%
부산광역시 동구	137	193	71.0%
부산광역시 영도구	131	185	70.8%
부산광역시 중구	125	183	68.3%

- 부산지역의 정비율을 다른 광역지자체의 정비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대상 조례 건수는 38,672건이며, 정비완료건수는 30,975건으로 정비율은 80.1% 수준임.
- 부산지역의 정비율 73.5%는 전국 정비율 80.1%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 부산북구의 정비율 76.1%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체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

[표 11]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필수정비조례 정비율

광역지자체	정비완료건수	정비대상건수	정비율
전국	30,975	38,672	80.1%
제주	482	568	84.9%
경남	4,303	5,295	81.3%
경기	7,367	9,068	81.2%
세종	354	439	80.6%
강원	4,117	5,145	80.0%
충남	3,539	4,428	79.9%
충북	2,633	3,333	79.0%
전북	3,275	4,154	78.8%
전남	4,905	6,242	78.6%
경북	4,865	6,298	77.2%
대전	1,035	1,351	76.6%
광주	1,039	1,360	76.4%
서울	3,917	5,206	75.2%
울산	1,015	1,350	75.2%
인천	1,697	2,259	75.1%
부산	2,494	3,391	73.5%
대구	1,587	2,170	73.1%

□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내역

- 2023년 8월 기준으로 44건인 부산북구의 미정비 필수조례는 [표12]와 같음.
- 이 가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등의 경우처럼 아직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정비대상인 경우가 6건이었고, 시행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정비대상이 6건이었음.
- 한편 위임법률이 시행되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정비대상 조례를 정비한 지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등 6건이었음.

[표 12] 부산북구 필수조례 미정비 위임조문 목록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미정비 지자체	정비대 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2016. 11. 30	154	242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8. 4	1	228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2022. 8. 4	1	22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2023. 1. 1	2	24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2023. 3. 21	0	2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2022. 3. 1	0	2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2022. 3. 1	0	2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 1. 1	0	2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 1. 1	0	2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2017. 3. 30	139	243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2015. 12. 29	14	22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2017. 1. 28	22	50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2022. 12. 8	1	24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2022. 6. 22	0	243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 책본부 등)	2017. 12. 3	112	2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2017. 7. 26	215	228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2021. 6. 23	0	228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018. 1. 18	101	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2023. 9. 29	156	2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2018. 6. 20	0	22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2022. 1. 13	2	24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이의신청 등)	2022. 1. 13	1	243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2022. 10. 27	2	24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2017. 7. 26	31	26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2017. 9. 5	212	24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2022. 12. 27	0	261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2017. 7. 26	58	242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2017. 7. 26	10	26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023. 3. 14	0	243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2022. 1. 13	65	243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2023. 9. 22	5	243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2023. 9. 22	3	243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0	243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0	243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2023. 9. 22	0	243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2022. 1. 13	0	243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022. 1. 13	0	24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2022. 1. 13	2	24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22. 1. 13	2	24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2022. 1. 13	0	24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022. 7. 5	148	243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2023. 3. 28	0	226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2022. 4. 28	1	2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2022. 1. 28	159	24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_자치법규 지자체별 정비현황

Ⅳ. 부산북구 자치법규 정비 과제

1.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정비방향 점검

1)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중 우선정비 대상 검토

□ 시행 1년 이상, 정비대상 중 10% 이상 정비사례 대상

○ 이하에서는 부산북구 미정비 필수조례 가운데 상위법령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도과한 위임조례로써 정비대상 지자체의 10% 이상이 정비를 완료한 13개 조례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위임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비대상 사항, 타 지자체의 정비사례를 확인함.

○ 이들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상위법령이 시행된 지 1년 미만인 위임조례의 경우 단순히 집행부의 개정준비 일정상의 시간적인 요인으로 인한 미정비인 경우가 많고, 상위법령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정비완료한 지자체가 거의 없는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³⁾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정책사업이 실행되지 않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검토 결과 우선정비대상 13개 가운데 다음의 8개 사례의 경우 부산북구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5개의 사례는 부산북구가 정비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산북구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미정비로 집계되는 등 법제처의 집계상 오류인 것으로 파악됨. 이들 5개 사례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통해 법제처에 확인 및 시정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것으로 판단됨.

2) 정비 필요 미정비 필수조례 정비방향 점검

□ 8개 미정비사례에 대해 조례제·개정을 통한 정비 제안

- 우선정비대상 13개의 조례 가운데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8개의 필수 조례들을 위임법령별로 정리함.
- 위임법령에서 조례로 정비과제를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하고, 정비완료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후, 이들을 참고로 부산북구의 해당 조례 정비방향에 대해 정리함.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정비필요 필수조례 정비방향

1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위임조문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비과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 금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중 기장군,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서구, 중구 등 미제정
정비방향	‘부산광역시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규 제정
2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위임조문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u>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정비과제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타 지역 정비사례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정비방향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현황 확인 및 신규조례제정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위임조문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u>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u>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과제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의무,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건물에 대한 용도지정	
타 지역 정비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관련 조문 신설 개정	
4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위임조문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생략) ③ <u>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정비과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신규 조례 제정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위임조문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u>	

	<p>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정비과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정비방향	조례 미운영 사유(공설 장사시설 운영현황 등)에 대한 파악 필요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위임조문	<p>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u>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u></p> <p>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p> <p>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p> <p>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p> <p>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정비과제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경비지원 반납관련사항
타 지역 정비사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등
정비방향	부산북구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 및 장학금지급중단 및 반환규정 조문 제정 검토
7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위임조문	<p>제3조(적용범위) (생략)</p> <p>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생략)</p> <p>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p>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비과제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
타 지역 정비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 36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 12조의2(시간제 근무) 등
정비방향	부산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및 시간제공무원 지정 관련 조문의 신규 제정 검토
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위임조문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
정비과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정비방향	부산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신규 제정
<input type="checkbox"/> 건강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설치근거 제정 검토 필요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자치구 중 금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등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북구를 포함해 기장군, 강서구, 남구, 동구, 동래구, 서구, 중구 등은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는 17개의 건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북구에는 부산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⁴⁾
- 부산북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로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부산시건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 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관련 입법부작위에 따른 사무미비 가능성 검토 필요

-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제2항에서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략)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정비대상 243개 지자체 가운데 112개 지자체에서 정비를 완료했으며, 부산북구를 포함해 131개 지자체는 미정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법규의 문장구성이 당위적 현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운영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법률의 제정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입법부작위에 따른 행정사무수행상의 미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근거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기초자치구만 미정비한 사유 점검 필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에서는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 및 일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외에 이러한 의무부과가 필요한 건물의 용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위임법률의 조문에서 확인되듯, 해당 사무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기초사무이며, 정비대상 자치단체는 228개로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세종특별자치

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음.

- 정비대상 228개 지자체 가운데 미정비 지자체는 13개로 모두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것으로 확인됨.
- 부산북구의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2년 9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3년 3월 29일 개정되어 시행중임.
- 해당 조례는 총 29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타의 위임조문들은 반영하고 있으나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조례로써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속초시, 강릉시 등 정비완료로 확인되는 여타의 기초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이 두항목에 대해 제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만 해당 시설에 대해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확인한 바와 같이 이는 위임법률상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광역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3항에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고 한 취지에 따라 광역의 사무로써 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 위험 최소화 위한 행위제한 입법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따라 위임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정비대상 지자체는 113개이며 이 가운데 101개 지자체가 정비를 완료했고(부산광역시의 경우 영도구, 해운대구 등 정비완료), 부산북구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조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재해의 위험을 최대한 경감하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에 관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률의 취지를 위반해서는 안될 것임. 입법 부작위에 따른 사무수행의 미비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임.
-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 행위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예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p>■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p> <p>■ 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의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침수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붕괴위험지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p> <p>■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의 예외규정)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昇高) 및 고상식(高床式)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p>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침수 및 유실 등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예외규정)

급경사지가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붕괴위험 급경사지의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급경사지의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설 장사시설 유무 및 관리 필요성 점검 필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에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정비대상이며, 이 가운데 156개 지자체가 정비를 완료했고, 86개 지자체가 미정비인 것으로 확인되며, 부산광역시 본청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기초지자체는 모두 미정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부산영락공원과 무산추모공원 등 2개소의 부산광역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이 광역사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 않는 다른 사

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북구 관내에 상위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공설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면⁵⁾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 장학금 등 반납사유 규정 검토 필요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서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해당 시행령에 따른 정비대상 지자체는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260개 지자체이나 현재 정비를 완료한 지자체는 3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29개 지자체는 미정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정비완료 지자체의 조례는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광역 가운데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기초 가운데에는 동해시, 공주시 등과 같이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임.
- 이들 조례의 경우는 산하공무원 가운데 특정 분야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 및 대학과정 야간 수학자 등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장학금의 회수에 관한 조문을 두어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두 번째 경우는 광역 가운데 충청남도, 기초 가운데 밀양시, 화성시 등과 같이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나 의령군, 서천군처럼 ‘위탁교육비 지원반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임. 이들 조례의 경우는 위임상위법령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지자체의

5) 현재 부산북구청 홈페이지상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재량 또는 실정에 따라 달리 반영하는 내용이 없어 입법경제상 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부산북구에는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재직 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공무원 지정 규정 제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제25조의3은 근무시간의 단축임용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법률에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조례로 함께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에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으며, 주당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위임하고 있음.
- 한편, 조례정비를 완료한 사례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임용 외에 재직 중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지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대한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방별정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지정을 허용함)
- 따라서 해당 조례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타 정비완료 지자체 조례의 핵심

적 규율내용인 재직중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필요

- 지속가능발전법 제8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에서 위임된 필수정비조례는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외에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항 및 제8항,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 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등 9개인데 이 가운데 제8조의 경우만 정비대상 지자체가 243개 지자체 전체이고, 나머지는 17개 광역지자체로 되어 있음.
- 그런데 해당 조문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⁶⁾,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제8조 ‘지방기본전략’에 관한 내용은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지방기본전략만 기초지자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음.
- 한편 제8조에 대해 정비완료로 집계되는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조례에서 기본전략의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에는 부산진구와 동래구에서 정비완료 사례가

6) 사무구분에 있어서 규정방식의 법문표현과 규정방식에 있어서 명확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나타나고 있음. 주운현·임정빈(2021).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186쪽

확인됨.

- 20년 주기의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해 부산북구 지속가능발전조례의 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정비 상황 집계 착오 시정 필요 필수조례

□ 미정비사례 중 5개는 정비대상 기준 등 재점검 필요

- 한편, 우선정비 대상 필수조례 가운데 나머지 5개의 사례는 부산북구의 경우 정비대상이 아님에도 정비대상으로 분류했거나 부산북구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미정비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 5개 사례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통해 법제처의 집계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15] 집계 착오시정 필요 필수조례 사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위임조문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생략) 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정비과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2조의2(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p>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운행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p>
정비방향	자치구 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위임조문	<p>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생략)</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u>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u>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정비과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타 지역 정비사례	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양산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제처에 점검요청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조문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u>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u> (생략)
정비과제	1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타 지역 정비사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등
정비방향	법제처에 정비완료로 집계 수정 개선제안 필요
4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위임조문	<p>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p>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p> <p>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p> <p>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p> <p>② <u>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u></p>

	<u>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과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무여비 비용
타 지역 정비사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방향	법제처에 정비완료로 집계 수정 개선제안 필요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12(이행강제금)
위임조문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u>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u> (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생략)
정비과제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요금의 하한액
타 지역 정비사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방향	시조례 준용 명시하고 있어 미정비판단 이유 확인 및 시정 필요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자치구 사무인지 확인필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관한 교육)의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전국 243개 지자체 전체가 정비대상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 그러나,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모두 해당 조례를 정비했고 도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수의 지자체가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과 달리 특광역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모두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의 사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정비대상 지자체도 자치구를 제외한 161, 또는 169개로 제시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의 조례입법 미비의 사안인지 상위법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3조의 사무권한 또는 책무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제정취지상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낙동강수계위 주민지원사업대상 아님. 조례필요성 낮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비대상 50개 지자체 가운데 북구를 포함해 강서구, 금정구, 사상구 등 부산광역시 자치구들은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음.

○ 주민지원사무는 낙동강 수계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과 행위제한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따라서 만약 법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미비로 인해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입법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라 낙동강수계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

적으로 수행되며,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설치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집행됨.

- 이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은 낙동강 수계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⁷⁾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통계(2002-2021)’⁸⁾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수준 향상 등의 직·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댐 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임.
- 이에 따른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울산울주군, 경상북도 7개시 8개군, 경상남도 5개시 4개군 등이며, 부산광역시 자치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부산지역 자치구의 경우 위임법령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므로, 정비대상에 부산지역 자치구가 포함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제처에서 정비대상을 재정리해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제처에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함.

7)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해당사업이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하고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행정자치부-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_낙동강수계법 제 23조 등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59834&rowidx=1775)

8)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보고서13쪽

<https://www.me.go.kr/nd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418&orgCd=&boardId=1567120&boardMasterId=264&boardCategoryId=&decorator=>

□ 연가보상비 정비완료 지자체와 유사한 조례 운영중, 집계 개선 필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 5(연가보상비) 제1항에서는 1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연가계획 및 허가 등의 조문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조례 정비현황⁹⁾에 따르면 정비대상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12개 지자체에서 정비를 완료했으며, 부산북구 등 31개 지자체가 미정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가운데에서는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등 6개 지자체가 정비를 완료했고, 북구와 강서구, 금정구 등 10개 지자체가 미정비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부산북구에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공무원 복무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가계획 및 허가 조문 역시 운영되고 있어 미정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집계상의 착오인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상황을 정리해 법제처에서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표 16] . 연가보상비 관련 조문 비교(정비완료집계)

부산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회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9) <https://www.law.go.kr/ordinDelegationSc.do?menuId=3&subMenuId=29&tabMenuId=149#AJAX>

<p>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p> <p>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p> <p>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p>
---	--

□ 의정활동비 등 정비완료 지자체와 유사한 조례 운영중,
집계 개선 필요

○ 지방자치법 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비대상 243개 지자체 중 65개가 정비완료로, 178개 지자체가 미정비로 집계됨. 그러나 부산북구(최초제정시점 2017.11.10.)를 포함해 미정비로 집계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법규 내용 역시 정비완료지자체의 법규와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조례의 경우 역시 위에서 확인한 연가보상비 관련 조례와 같이 단순히 정비현황 집계상의 착오인 것으로 추정됨.
- 역시 상황을 정리해 법제처에서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표 17]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조문 비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정비완료로 집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미정비로 집계)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①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p>제3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p> <p>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p> <p>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p> <p>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개정 2006.5.18>)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3,345,000원으로 한다.</p> <p>② 전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게 대한 그 해당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p> <p>제4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p> <p>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p> <p>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별표 6에 따른다.</p> <p>제6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p>

<p>지급한다.</p> <p>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p> <p>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④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매년 1% 인상한다. 다만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일 경우 그에 준한다.</p> <p>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p> <p>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	---

☐ 시조례 준용한다고 명시, 미정비판단 적절성 확인 필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12 (이행강제금)에서는 법 제11조의 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합산항목의 하나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의 하한액을 두고 있으며, 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시·군·구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부산북구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조례에서는 제4조(주차요

금 및 감면)조문을 통해 시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감면 등)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시조례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중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보며, 제3조의2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로 본다

- 한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별표1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규율하고 있음.
- 이같이 기초자치단체인 부산북구의 주차요금을 광역시의 요금제도를 준용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미정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 특광역시의 경우 주차요금체계를 기초마다 달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광역조례를 통해 규율하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 이들 기초지자체를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비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위원회별, 편장별 조례 정비 필요성 검토

□ 정비 필요성 분석 대상 조례 판단 및 구성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3년 8월 기준 현행 부산북구 조례 339건 가운데 현 9대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는 98건임. 이들 조례를 제외한 24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점검함.
-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이후 정비과정의 진행 등을 고려해 부산북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위원회 소관기관의 소관조례들을 기준으로 분류함.
- 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용어변경 등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 등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정비방향을 제안함.
- 또한 상기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조례라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또는 보완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함.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기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복지교육국(교육지원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 입법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시정: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관련 조례정비

- 행정안전부(2022) ‘2022 자치법규 정비사례집’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치법규로서 국가유공자 등을 공공시설 이용감면 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자치법규를 정비과제로 선정해 정비를 추진함.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개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 소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관계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로서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법령의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입법취지에 따른 요금감면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감면대상은 8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원, 수목원, 박물관·미술관,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능원 및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등의 시설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되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¹⁰⁾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등. 타법령내용도 유사함

[표 19]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별 이용료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고궁 및 능원	100분의100
국공립공원	100분의100
독립기념관	100분의100
전쟁기념관	100분의100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100
국공립수목원	100분의100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100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제외)	100분의50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50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단체장의 재량 등으로 모호하게 해석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거부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조례’에서는 제4조(예우 및 지원) 제3호를 통해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이들 법령 및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공시설 이용조례의 내용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소관부서: 총무국 문화체육과
- (현황) 현행 조례 제15조(사용료의 징수)에서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별표3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에서는 구청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별표 5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별표5의 감면기준은 앞서 확인한 바 8개 법률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면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조례’에서는 제4조(예우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고 있지 않음.
- 그보다 더 핵심적인 정비필요사항은 해당 감면조항이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요금 감면에 대해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들은 지자체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정비방향은 요금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규정이 있지만 면제대상자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별표 규정 가능)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감정률은 법령상 의무감정률인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

[표 20] 사용료 감면기준(별표5)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50%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		50%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30%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 시		10%	
2종목 이상 등록 시		각 종목별 10%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 시		10%	
장기일시 등록 시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이내	

○ (정비방향) 구청장의 재량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16조의 조문을 의무사항에 맞게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별표5의 감면기준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한 감면기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p> <p>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p>

<p>포함)</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p>	<p>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p> <p>9.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p> <p>10.~00. (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p> <p>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 포함)</p> <p>3.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p>
--	--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6조 제2항 제3호 관련)
(구청장의 재량에 따른 감면대상 열거)

②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소관부서: 총무국 문화체육과

○ (현황) 현행 조례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해당 감면조항 역시 감면을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요금 감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위에서 확인한 8개 보훈관련 법령에서 감면적용되는 국공립공연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서 확인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감면규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비방향) 구청장의 재량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 9조의 조문을 의무사항에 맞게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함하고 재량에 따라 감면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으로 둠.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p>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대관공연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p>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p> <p>9. 부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p> <p>10.~00. (생략)</p> <p>③ 구청장은 제 2항외에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	---

□ 과잉금지로 인한 권리침해 시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한정재산자, 금치산자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수상대상 후보, 위원회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전적, 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
- 더구나 이 같은 과잉금지 규정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제 8조 및 장애인 차별법 제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함.

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황) 현행 조례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침해임.

○ 해당 조례에서는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을 통해 지도위원의 자질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 2(지도위원의 해촉)을 통해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격자를 통한 운영이 가능함.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또한 이는 해당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아동위원회위

원의 결격사유 가운데 제2호 피한정후견인을 2022년 12월 14일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에 비추어도 그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역시 제5조(결격 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 (정비방향)조례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하 생략)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이하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관리규정,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소관부서)총무국 행정지원과
- (현황) 조례는 아니지만 각각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인 2개의 훈령에서도 이같은 권리 침해규정이 확인되어 정비가 필요함.
- 공무원 관리규정의 경우 제13조(결격사유)의 제1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의 경우 제6조(결격사유)의 제1호에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피한정후견인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 등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국가법령에서는 사전적 사후적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을 과잉입법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공무직관리규정의 경우 제19조(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채용부서의 장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규율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경우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사후적 직무수행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정비방향)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p>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하생략)</p> <p>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하생략)</p>	<p>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p> <p><u>1. 피성년후견인</u> 2. (이하생략)</p> <p>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p> <p><u>1. 피성년후견인</u> 2. (이하생략)</p>

☐ 상위법령 준수를 위한 정비 필요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소관부서) 총무국 행정지원과

- (현황)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 중임
- 거주 외국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상위법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제3조를 통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제6조 제2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음.
- 해당 법률과 제정목적이 같은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 외국인 조례’에 부산 북구의 외국인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률과의 연계를 확보하고 상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비방향) 제4조(구의 책무)에 구청장의 책무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의 경우와 같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법규 제정 취지 확보 위한 보완 필요성

①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

○ (소관부서) 총무국 행정지원과

○ (현황) 현행 부산광역시 복구 포상조례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공무원 및 주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례에서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모든 포상을 행정지원과장이 통제관리하도록 하는 ‘포상통

제'조항과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도록 한 '이중포상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 이들 조문들은 질서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북구 체육상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상제도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됨.

- 한편, 포상이 이루어진 이후 허위공적사실이 드러났거나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포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함.
- 이는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의 경우 제6조(선정 취소)를 통해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임.
- (정비방향) 허위공적임이 확인되거나 법령상 부적절한 포상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포상제도의 취지와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적 보완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신규)	<p>제15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p> <p>2. 별도 규칙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p>

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운영위원회)

-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 이하 같음. 조문번호만 제13조로 조정함

2) 주민도시위원회

소관기관: 주민생활지원국(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정비

① 부산북구 빈집 정비 지원조례

- (소관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 (현황) 해당 조례는 법령체계상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하위법규로 대부분의 내용이 해당법령에서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하위법규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청장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청장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재량에 의한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위법률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상위법률에서 5년 주기의 의무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률을 위배하고 법해석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같은 혼란은 해당 조문에서 의무의 주체가 ‘시장 군수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의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된 결과일 수 있음. 그러나 법 제2조(정의)제1항 제1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고 하여 ‘시장군수등’을 시장과 군수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약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부산 북구의 구청장 역시 법 제4조에 따라 5년 주기의 빈집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수립해야할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임.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규정의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상위법률에서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잘못해석했을 뿐 아니라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를 통해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율되고 있음에도 이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정비방향) 해당 조례의 입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규정에 상위법률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입법경제상 불필요한 중복을 막고 상위법령 개정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조문번호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정의 규정 역시 상위법령에서 규율하

고 있는 내용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조례로써 보충적으로 기술해야 할 규정들을 중심으로 조례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등 참고)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상위법령의 정의규정에 없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변경 또는 추가 필요성이 있는 조례의 정비

①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 (현황)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조례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연혁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2항이었다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조문번호가 변경되면서 제13조 제2항으로 개정된 것임.

○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한 것으로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포괄적인 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조례 제정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개별 조례의 제정취지를 확인해주는 인용조문이라고 하기 어려움.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정비방향) 야간의 안전한 보행횡단을 위한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는 상위법률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인용조문으로 개정함. ‘조례안’은 ‘조례’로 수정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조례

○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현황)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는 법령체계상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이 적용되는 하위법규에 해당함. 보호대상인 동물에 대한 정의 등을 포함해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서 부산북구의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준인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의 입법적근거 등 역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됨.

○ 상위법령은 조례에서 다시 기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동일하게 기술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또는 상위법령 개정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법령체계상 상위법령과 하위법규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법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입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정비방향) 제1조(목적)에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다음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상위계획의 근거조문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 <u>동물보호법</u> 」에 <u>따른</u>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u>법 제6조에 따른</u>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주민복지과

○ (현황) 현행 조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 운영됨. 해당 조례는 법령체계상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자치법규임. 법해석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입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상위법령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방향) 제1조(목적)에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다음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적용한

일괄정비검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 법제처는 ‘법령용어순화사업’과 ‘법률한글화사업’을 거쳐 2006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 표현 대신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법령의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입법 의도와 제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임.
- 법제처는 이를 위해 △쉬운법령, △ 뚜렷한 법령, △반듯한 법령, △ 자연스러운 법령 등을 기본원칙으로,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하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 또는 일상용어로 대체하는 방향의 개정이 다수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 정비 사례

- 서울특별시는 2019년 12월 31일과 2021년 3월 25일, 2021년 12월 30일 각각 제정된 3건의 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실시했음.
- 먼저 2019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

정비 조례」의 경우, 제1조(목적) 외에는 정비대상 개별 조례별로 개별 조문 하나씩을 구성하고 있는데 본문이 제206조까지임. 이 조례를 통해 정비된 조례는 총 205건임.

- 2021년 3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는 제1조부터 각 조문이 개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21조임.
-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 정비 조례」 역시 제1조부터 각 조문이 개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56조임.
- 총 3건의 조례를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정비대상이 된 일본식 표현과 정비후는 다음과 같음.

[표 21] 서울시 조례 일괄정비대상 일본식표현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기타	그 밖(에,의)	당해	해당	부의	회의에 부치는
감안	고려	노임	임금	명기(하여,하도록, 할, 한다)	명확하게 적(어,도록,을, 어야 한다.)
입회	참관	지불	지급, 납부	하청	하도급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 경기도의회 일괄 정비 사례

- 경기도는 2012년 5월 11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2022년 12월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조례 내에 다음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일괄정비함.

[표 22] 경기도 일괄정비대상 용어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정비전	정비후
감안	고려	잔임기간	임기의 남은 기간	허위로	거짓으로
용이한	쉬운	입회	참관	부의안건	안건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개폐	개정·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절사하고	버리고	쌍방	모두 또는 양쪽
상당	상응	소요(된,되 는)	(걸린, 필요로 하는)	요하는	필요로 하는
비치	보관	비치하고	갖추어 두고	~인	~명
~내지~	~에서 ~까지	계리	회계처리	~으로 하여금	~에게
증빙서류	증명서류	~자	~사람		

○ 부산북구의 경우 현행 조례에 대해 위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괄정비조례의 제정을 통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부산북구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
괄정비 조례

1)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2) 관련 현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 취지 등에서 확인하듯, 조례 등이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일본식 한자어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법의도와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제처의 법령정비방향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해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3) 제안취지

- 앞서 검토한 광역지자체의 정비사례 가운데 가장 여러차례 적극적인 정비를 수행해 온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당 개정과정에서 정비대상으로 명시됐던 용어들을 대상으로 현행 부산북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주민들의 부산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괄정비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할 것을 제안함.

4) 조례제정안

☐ 부산북구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20조2 제1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제3항 및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먼지털이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물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물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13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2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71조 제3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14조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제15조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제16조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제17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기타의회의에의 부의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의회의에의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8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9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20조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1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2조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3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4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25조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6조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7조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8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29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0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31조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2조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3조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4조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5조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6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7조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8조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40조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지출증빙서류”를 “지출증명서류”로 한다.

제41조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V. 부산북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

1. 부산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2) 관련 현황

○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모유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영유아 및 모성 건강의 보호 및 모유수유의 편의 확보를 통한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 됨.

－ 모유수유 등을 위한 공간을 설치 또는 지원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 지자체에 따라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모유수유주간을 운영하거나 모유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23] 타 지자체 모유수유지원조례 주요내용

지자체명	조문내용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p>(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p> <p>1.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p> <p>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p>

	<p>3.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학교</p> <p>4. 여성 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개정 2021.3.31></p> <p>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p> <p>6.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p> <p>7.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p> <p>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p> <p>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p>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p>(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p>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p>(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운영) 구청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을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p>(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 교육 2.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등”이라 한다) 설치·지원사업 4. 완전모유수유율 제고 등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사업 5. 모유은행 설치·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모유은행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모유분비 부족, 우유 알레르기 등으로 모유 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위하여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타인의 남는 모유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필요한 영아에게 나누어 주는 모유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유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p>

	<p>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모유수유주간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모유수유 권장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	---

- 부산북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모유수유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하에서는 해당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되,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조례’에 관련 조문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제안 취지

- 모유수유 지원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와 교육 홍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및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4) 주요내용

☐ 목적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부산북구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

☐ 사업의 내용

○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및 지원, 교육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

□ 기타

○ 모유수유 지원계획의 수립, 모유은행의 운영 등 검토

5) 조례 제정안

부산북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부산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부산북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북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 여성노동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의료기관, 기차역, 전철역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2) 관련현황

-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북구에는 구포 꼬마다락방, 공동육아나눔터 울리·화정점, 어촌민속관 체험놀이실, 공동육아나눔터 덕천점 등 4개소의 공공실내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음.

[표 24] 부산북구 공공실내 놀이터 현황

공공실내놀이터	위치
구포꼬마다락방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형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울리·화정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어촌민속관 체험놀이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어촌민속관
공동육아나눔터 덕천점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행복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자료:부산북구 홈페이지 (복지정보> 여성/보육>공공실내놀이터

3) 제안 취지

- 부산 북구의 공공실내놀이터는 4개 또는 5개로¹¹⁾, 조성 및 관리주체와 운영방식이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¹²⁾

11) 어촌민속관은 동래구 소재 해양자연사박물관내 소재인 것으로 추정

12) 조성 및 운영주체가 북구청장이 아닌 경우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 공공실내놀이터는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놀이와 창의적인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실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북구청의 책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목적

-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 창의적 놀이프로그램과 안전한 놀이공간 구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가능

☐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규정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부과, 감면적용대상 명시

☐ 이용 및 입장제한

- 범죄예방 및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시적 조항을 통해 이용금지 조문 구성 가능.

☐ 관리 및 운영 책임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안전요원 배치 등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부산 북구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관련 현황:

○ 현행 부산 북구 자치법규에서는 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과 관련해 ‘부산

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4항을 통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3) 제안 취지

- 의회에서 논의되어 의결을 통해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해당 건의안 등이 휘발되지 않고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이같은 규정은 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구민의 대표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구청장의 책무

-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소관부서가 해당건의안 등을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행정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

☐ 사후관리 및 보고

- 소관부서는 매 분기 처리진행상황을 파악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청장은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2회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5)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소관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및 처리) ①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부처 및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회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관련부처 및 기관 전달상황, 회신 및 행정반영결과 등에 관해 의회 홈페이지, 구정 및 의회 소식지와 지역언론에 적극 홍보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2) 관련 현황:

- 부산북구 의회에서는 2009년 제1호 의정 소식지를 발행한 이래 연 4회 정기적으로 의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근거 자치법규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집행부의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전국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의정 홍보 및 의회 소식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자치구 가운데에는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서 의회(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와 동래구의회에서는 의회소식지 발행을 포함해 소셜미디어, 인터넷홈페이지, 의정뉴스 및 홍보영상 등 의회홍보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3) 제안 취지:

-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민들의 대표로써 의회는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부산북구의회도 구민과의 소통 및 참여증진 등을 위해 의회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목적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등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홍보활동의 원칙

- 구민들의 참여보장, 알권리 증진,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 홍보매체 운영

-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홍보영상,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활용 및 제작 및 운영 등의 위탁근거

5) 조례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SNS”라 한다)·소식지 등을 말한다.
2.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영상, 의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2. SNS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5.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SNS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SNS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회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5. 부산광역시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2) 관련 현황:

- 중앙정부의 각 부처 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공모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사업 가운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함.
- 한편으로는 매칭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가운데 보조율이 낮으면서 지역에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패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책임을 단체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사전검토의 원칙, 의회보고 등을 규율하고 있음.
- 부산 북구의 경우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히 공모사업의 유치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전검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종합계획수립의 책임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있고, 의회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확인됨.

3) 제안 취지:

- 실적 일변도의 공모사업 운영은 오히려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지원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공모사업의 운영은 구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인 계획과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구청장이 갖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구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내용:

☐ 목적

-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수립

-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

☐ 사전검토기준

-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 및 담당부서 의견, 재정전략, 효과 예측 등

☐ 의회보고

- 공모사업 신청 전,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 연1회 정기 보고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1) 소관부서: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2) 관련 현황:

○ 사회경제적 고용 여건의 변화로 조기에 은퇴하는 50세 이상 65세 이하 신중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 부산북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국비지원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양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해당사업의 예산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진근거에 해당하는 부산북구의 조례는 없는 상황임.

○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신중년(중장년층, 중년층) 생애 재설계 또는 신중

[표 25] 2023년 부산북구 신중년 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23년 9월기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88	244	0	244	0	279	21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108	0	0	108	0	108	0

자료: 지방재정365.

년 인생 이모작(중·장년층, 중년층) 등 명칭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 및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임.

3) 제안 취지:

- 고령사회로의 진행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년이 은퇴 이후 사회생활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헌하거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교육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일환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사업이 추진근거로써 조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시행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주요내용:

□ 목적

- 신중년의 생애재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계획 수립

○ 구청장이 5년 주기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

□ 지원시설 설립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활기찬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1) 소관부서: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 관련 현황:

- 지난해 11월 15일 부산노동권익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청소년 가운데 약 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운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38.5%,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4.3%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또는 조기퇴근요구, 급여지급지연, 임금체불 및 성희롱 등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또는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사태가 다수 보고됨.
- 청소년 노동자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거나 업주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에 노출되고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임.
-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 본청과 중구 및 영도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3) 제안 취지:

- 청소년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구제체계 구축,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우수사업장 선정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책임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할 것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목적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청소년 활동단체,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의2(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청소년을 일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청소년의 건강이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3(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 및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청소년 활동단체,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6.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활성화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부산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 단체 대표자

3. 청소년노동인권관련 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교부

2.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북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부산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1)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2) 관련 현황: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장군, 연제구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내기업

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3) 제안 취지:

-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 등의 구매시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목적

-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적용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 적용대상 공공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5조(구매촉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성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9.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1)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2) 관련 현황:

- 코로나 19를 계기로 사회적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해당 법률 제10조 제3항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4항 지역별 지원계획 등에서 관련내용 일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정위는 알 수 없으나 법제처의 필수정비조례로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3) 제안 취지:

- 코로나19 위기는 지나갔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수준의 향상,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필수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노동 전반에서 낮은 처우와 위험 등 처우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인식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경우 본청과 사하구, 수영구,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구, 영도구,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임.

4) 주요내용:

☐ 목적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 위임사항

-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지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 규정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시 부산광역시 북구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0.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1) 소관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2) 관련 현황

-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은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2023년 부산 북구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10억원 수준임.
- 가로등의 설치와 운영은 안전과 편의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많은 사업으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로등의 설치기준과 설치의 우선순위, 관리자의 운영 등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사업의 추진 근거로 삼고 있음.
- 부산 북구의 경우 추진 근거로써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3) 제안 취지

- 조례 제정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정책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및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함.
- 또한 에너지복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에너지 취약지역과 보안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우선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목적

- 부산 북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 설치기준

-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하고, 소요 자재는 KS표 시품, 규격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
-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 노력

□ 설치 우선순위와 신설 제한

-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밀집 주거지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수 개인의 편의와 영리를 위한 장소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제한함.

□ 비용부담

- 가로등의 설치와 운영의 비용은 구가 부담하되, 특정수혜자가 설치한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수혜자가 부담함.

5) 조례제정안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보도등을 포함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교량등이란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구청장이 설치한다.

-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 전통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지하차도, 기타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반드시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며,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
3. 그 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다.

제6조(설치의 우선순위) ①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빗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등),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청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구청장은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구청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부산광역시 복구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1) 소관부서: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 관련 현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다가 만18세에 자립정착금과 사회로 나오는 ‘보호종료 아동’이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600명에 달했으며 미성년인 이들의 보호종료후 자립지원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됨.

○ 2021년 ‘보호종료아동지원방안’이 발표되고 이들에 대한 명칭을 ‘보호종료 아동’이 아닌 ‘자립준비 청년’으로 변경함.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등이 신설되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됨.

○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3) 제안 취지: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4) 주요내용:

☐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 연간계획수립, 지원체계, 추진방법 등

☐ 자립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 지역주민,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립지원 기본방향 협의, 자립지원서비스 발굴 등 협의

5)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
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
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8.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